

# 우리 역사에서 反日反民輩의 청산문제

김 동 수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 가 : 附日反民輩의 범주

1. 용어문제 : 친일파, 부일반민자, 附日反民輩, 反民者, 民族反逆者, 賣國族, 親日分子 등
2. 부일반민배의 범주
  - 『친일인명사전』 기획위원회에서 해방이후 발표된 모든 친일파의 규정안을 취합하고 보충하여 새롭게 제시한 부일반민배 범주안 (『친일파란 무엇인가』 p. 290)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16대 국회제정안과 시민연대의 개정안 초안 반민족행위자 규정비교표(요약)

<16대 국회 제정안>	<시민연대 개정안 초안>
제2조 (정의) 4. 독립운동을 방해한 단체의 장 또는 수뇌 간부	6.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방해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
10. 중좌 이상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협력한 자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현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 간부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고문 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8.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중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자 12. 일제시기 군대와 경찰에서 고등관(경시, 소위) 이상으로 재직된 자와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 11. 일제시기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된 자와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16대 국회 제정안>	<시민연대 개정안 초안>
15. 사법부 판검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13. 일제시기 판검사로 재직 한 자와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사법 관리
	14. 각종 지방 행정기관의 장과 도부 읍면 의회의원으로서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자
11.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선동요한 행위 12. 전국적 차원의 주도적 위안부 강제동원	15. 공출 추가 전국적 차원에서 삭제 16. 전국적 차원 삭제
13. 중앙의 문화기관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주도, 적극 협력한 자	17.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 운동에 적극 협력한자 (중앙 단서 조항 삭제)
18.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수탈을 주도한 자	19. 각종 경제 침탈 기구에 재직하며 적극 협력한 자 (기관단체 확대, 중앙 단서 조항 삭제)
	18. 민족문화 파괴말살,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신설)
	21. 반인륜범죄자 (신설)

## 나 : 반민특위(反民特委)의 발족과 와해

### 1) 반민특위 구성

-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민족에게 부과된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음. -식민지 잔재의 청산에는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중 민족정신의 회생도 매우 긴요한 사업. 민족정신의 회생, 민족정기의 확립을 위한 한 방편으로 민족반역자나 친일파 등을 새로운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실권적, 주도적 위치에서 배제 숙청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
- 그러나 미군정 당국은 한국에서의 점령정책을 수행함에 편의를 얻고자 일제시기의 관리나 경찰들을 그대로 활용토록 함. -군사적·전략적 고려로만 통치.
- 정치적 주도권은 점차 친일세력에 바탕을 둔 이승만과 한민당 계에 장악되어

감. 이들은 부일반민배의 숙청 등을 반대. 그러나 47년 7월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일반민배의 숙청을 주장하고 나섬. 그러나 이 법은 군정청에 의해 공포되지 못함.

- 대한민국 헌법 제정후인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에서 ‘반민행위자 처벌 특별법’의 제정이 주장됨. 위원회 구성. 이전 입법의원에서 제정한 ‘특별법’ 참고.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9월 22일에 공포되기에 이름. 이 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 위원장에 金尙德, 부위원장 金相敦 외 각 도별 1인씩 10인. 그리고 각 시도별 조사책임자를 선정. 또한 특별재판관, 특별검찰부, 중앙사무국의 조사부 요원 선임.

## 2) 반민특위 반대운동의 전개

-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음. 풍부한 재력과 권력을 동원해 집요한 반대운동을 전개함. 반대운동의 양상 ① 반민행위자 자신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반민법이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거나 반민자 처벌 주창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선전. 시위개최 등 ② 특위요원의 암살시도: 강원지부 조사부장 김우중 저격(49. 3. 28), 서울시경의 최난수 등이 특위위원 김상덕, 김병로, 권승렬, 김두한 등 15명 암살 계획 추진 ③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49. 6. 6)(소위 6.6사건) : 중부경찰서원들이 특위사무실을 공격. 특경대원들을 폭행 구타, 강제 구금시킴. ④ 국회의원 일부를 공산주의자라거나, 반민행위자로 지목 공격 - 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의 부일경력 폭로, 특위 강경파인 김명동의 뇌물수수설, 49년 5월 국회 프락치사건 발생: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8명 보안법·반공법 위반 구속 - ⑤ 이승만의 반민특위 반대입장 노골화 - 정부의 부일반민배 숙청건의 무시, 반민특위 활동 축소하라는 담화문, 반민법이 헌법위반이라는 담화, 특위특경단의 무장해제명령, 시경 수사과장 노덕술의 석방종용 등

## 3) 반민특위의 와해

- 잇단 반대공작 등으로 활동 위축됨. 특위 위원 내부의 강은 대립발생, 재판관 일부의 사퇴
- 반민법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개정안 등이 통과되어 마침내 49. 9. 22 활동 종료함.
- \* 682건을 다루었으나 실제 재판 받고 처벌받은 자는 10여명 불과. 그들도 곧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고 맴.

## 다 : 반민특위 와해 이후의 부일반민배의 득세

- 해방이후 미군정은 냉전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제 때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부일 협력자들을 대거 기용하여 남한을 통치함으로써 부일반민배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1946년 현재 미군정청에 재직중인 경위 이상 경찰 중 82%인 949명이 일제 경찰 출신.

군(軍)- 일본군 출신들이 주도권 장악. 1946년 1월 8일 국방경비대가 창설, 총사령관 원용덕은 만주군 출신, 제1연대장 채병덕은 일본육사 49기, 제2연대장 이형근은 일본육사 56기, 제4연대장 겸 경비대 총참모총장 정일권은 일본육사 55기.

반민배의 등장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됨.

- 이승만 정권도 반공체제를 공고히 하고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친일파 대거 기용하여 테크노크라트로서 재활용. 이러한 기류를 틈타 친일파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의 주류로 재등장.
- 1961년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 박정희 정권은 일본군 출신과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일제의 권력에 빌붙었던 부일 협력자들을 중용하여 이 나라를 통치함. 박정권 아래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자들만도 정일권(일본육사), 최규하(만주국 관리), 신현확(일본 군수성 관리), 진의종(일본국 관리), 김정렬(일본육사) 등임.
- 독립유공자로 둔갑 (윤치영, 윤익선, 김성수, 이은상, 전협, 서춘, 김성근, 전좌한)
-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으로 활동 (신석호, 이병도, 고재욱, 유광열, 이갑성, 백낙준, 이선근, 홍종인, 김성균)
- 국립묘지 안치(박정희, 백낙준, 진의종, 백두진, 엄민영, 황종률, 조진만, 이종욱, 윤익선, 이갑성, 이응준, 정일권, 김창룡)
- 3.1문화상 심사위원,(신석호, 이병도, 윤일선, 백낙준, 고승제, 고재욱, 고헌경, 유진오, 김팔봉, ....) 수상자(안수길, 백철, 모윤숙, 최정희, 이주홍, 이상범, 김경승, 김은호, 김기창, 김성태, ....)
- 기념사업 (김성수-동아일보/고려대/경성방직 계열, 김활란-이화여대, 고헌경-서울여대, 김기창-운보미술대전, 미술상, 김동인-동인문학상, 김두한-의송기념사업회, 김연수-삼양사, 수당장학회, 남인수-노래비, 가요제, 노기남-주교관, 일대기, 노천명-시비, 모윤숙-문화유적지 지정, 민병석-철도박물관, 박시춘-가요제, 가요박물관, 노래비, 박종화-월탄문학상, 박춘금-송덕비, 박태준-기념비건립추진, 방응모-계초기념사업, 백낙준-용재학술상, 동상, 백년설-가요제, 노래비, 백선엽-전

적비, 호국비, 백선엽상, 신석호-학술상, 서정주-미당문학상, 기념관, 문학제, 시비, 유진오-국제법학술상, 유치진-연극상, 동랑예술센터, 연극제, 유치환-생가복원, 청마거리, 시비, 문학상, 이광수-고택복원추진, 기념비, 집필실 유적지로 지정, 이난영-이난영가요제, 기념관준비, 이병도-두계학술상, 이선근-하성학술상, 이원수-시비, 문학비, 임영신-중앙대내 기념건물, 장학회, 기념사업회, 조연현-문학상, 생가, 정춘수-부조물, 채만식-기념사업회, 기념문학관, 문학비, 문학제, 채병덕-도서출간, 위령비, 전사비, 최남선-시비, 생가보존, 시조문학상, 현제명-기념관, 현제명나무, 홍난파-기념사업회, 노래비, 난파거리, 황신덕-추계예술대. 이승만-홍상 건립, 우남기념관)

- 정춘수 목사동상 철거 / 박중양 기념비 철거 / 박홍식 동상 철거, 조두남 기념관 폐쇄.

## 라 : 부일반민배 청산의 노력

- ① 의식의 공백기(49. 9~1964) : 반민특위 와해 이후 한·일 회담시기까지는 의식의 공백기. (부일반민배의 전성기, 일제치하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됨-부일반민배들이 반공·민주투사로서 명분 획득-주류세력이 됨. 이들을 비판하고 척결할 수 있는 세력은 제거됨.)
- ② 의식 싹틔기(1965~79) : 한일국교정상화 계기로 부일반민배에 대한 연구 시작됨. 林鍾國선생이 시작. 1966 『친일문학론』 출간, 그러나 부일반민배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미약.
- ③ 의식의 확산기(1980~ ) : 부일반민배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개인적· 개별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학문적으로 널리 공유되기 시작함. 임종국의 정열적 연구가 주도.

- 「민족문제연구소」발족- 학문적, 운동적 역량결집, 『친일인명사전』편찬 시도.  
실천운동: 정춘수 목사 동상 철거 / 박중양 기념비 철거 / 박홍식 홍상 철거 / 조두남 기념관 폐쇄 / 채만식 기념행사 반대 / 이홍렬 노래비 건립 반대 / 독립기념관내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 / 박영효, 윤치호 패널 철거 / 유치진 동상 철거 / 박춘금 비석 철거 / 삼일문 현판 훼손 / 김석원 홍상 철거
-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초,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혐의자의 서훈 취소 검토-중단.
- 1993년 12월,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137명의 서명으로 '민족정통성 회복 특

별법' 제출. 상정도 못하고 폐기

- 1997년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들의 재산몰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2001년 12월 개인 1850명과 185개 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통일시대민족문화 재단이 출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재단 산하 특별위원회로 발족했다.
- 2002년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이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과 그들의 구체적 친일행적을 공개
- 2002년 8월, <실천문학>이 광복절을 맞아 42명의 '친일 문학작품 명단'을 발표
- 2003년 8월 14일, 민족정기의원모임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발의-2004년 03. 02 본회의 의결 개정 통과(개악이란 비판) - 17대 국회에서 재 개정안 발의.

## 마 : 현재의 부일반민배청산을 저해하는 행위들

- 2002년 초, 김완섭,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발간, “독도는 일본 땅이며 이완용(李完用)은 조선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는 등 주장.
- “나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김활관, 모윤숙, 송금선, 황신덕, 심형구는 물론 김성수, 방응모를 존경한다. 그들은 민족을 반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거래를 살리기 위해 일제하에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였다. (중략) 망명하여 중국 땅에서 혹은 미국 땅에서 일제하 36년을 참고 견디어야 했던 애국지사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월간조선 4월호)
- “친일파로 낙인찍히면 해당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문에도 치욕을 준다. 어떤 이념 차나 경쟁심리 따위의 이해관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작용하는 것을 엄히 경계해야 한다.”(남시욱 성균관대 겸임교수, 조선일보, 2003년 3월6일 시론)
- “오늘날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가려내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도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소설가 복거일, 계간 철학과 현실)-복거일씨의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2003년 12월 국회 -친일인명사전편찬 예산 전액삭감.
- 이완용과 송병준의 증손자 등 친일파의 후손들이 조상 땅 되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근택의 후손도 소송제기.

※ 친일파 옹호론(2003. 학술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원이 정리 발표한 것)

### 1. 색깔론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집단은 빨갱이라는 주장.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가까웠다. 친일파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지금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X들은 죄다 빨갱이다.”는 주장

### 2. 공과론(功過論)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으로 든다.

### 3. 공범론(共犯論)

그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 공범론자들이 곧잘 드는 예가 창씨개명. 대부분의 사람이 창씨개명을 했으니 이들도 일제에 ‘협력’했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험박도 여기에 포함된다.

### 4. 망각론

과거는 흘러갔다는 논리. 50년이 지난 이 시점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친일파 청산은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해체로 친일파 청산 재론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도 포함된다.

### 5. 범부피해론(또는 호구책론)

권력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범부)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 서정주는 해를 따라 살아가는 무지랭이인 ‘중천순일파’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 6. 직분충실론(또는 희생론)

‘박정희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다녔다. (어느 시민)’, ‘민족언론(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 (김활란, 모 언론사주)’는 주장.

### 7. 순교자론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의 희생자(순교자)’라는 주장. 대표적인 논자가 3·1절 명단 발표 후 이른바 문제의 16인을 월간조선을 통해 적극 옹호한 김동길 교수.

### 8. 연좌제의 부활론

이제 와서 친일파 명단을 거론하는 것은, 죄 없는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9. 국론분열론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라는 주장.

### 10. 정치적 음해론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는 야당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과 결합된 음해라는 주장.

이밖에 “친일파 청산은 퇴행적 민족주의 담론이며, 국제화시대, 탈민족국가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논리”라는 주장, 여성친일파에 대한 비판을 “여성운동에 대한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탄압”이라고 논박하는 견해들도 친일파 옹호의 궤변.